

민주 “與, 지연 작전 일관한다면 단독 예산심사 임할것”

국힘에 예산 협조 촉구...“예산심사 파업에 나서” “초부자감세 저지하고 혈세낭비성 전면 삭감해” “구태의연한 정치적 주장 말고 성실히 응답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민의힘을 향해 “명분없는 예산심사 파업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단독이라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의 초부자 감세 등을 저지하겠다고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4일밖에 남기지 않은 여당의 모습이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며 “정부여당이 정부 원안 통과 등 준예산을 만들든, 민주당 탓으로 돌리면 그만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이 제대로 일하고 성실하게 예산심사에 임한다면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계속 국정조사를 불모로 잡고 무책임한 지연작전으로 일관한다면 민주당 단독이라도 예산 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내년 경제 상황과 관련해 연일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며 “재정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 인만큼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혈세낭비성 예산을 전면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일 뿐 예비심사에 대해 정부 동의권을 주장하는 건 과유불급”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토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단독처리한 예산의 재심사를 촉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과거 수차례 상임위 의결 과정에서 정부 동의 없이 처리해 온 전례가 아주 많다”며 “오히려 사임위 동의 절차를 문제 삼아 여당이 예결소위 심사를 거부한 건 사상 처음의 일”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최근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사업인 공공주택 예산을 감액한 것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고 봐서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청년 주택, 역세권 주택, 분양 주택에 대해 긍정적으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검토하려 노력했다. 문제는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분양주택 관련 등 7만2000호에 대한 명세서가 없었다”며 “중택 공급을 맡아서 하는 LH와 전혀 상의도 없었고 LH는 이런 물량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분양주택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협상이 아닌 강요에 가까운 주장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힘이 예산안 심사 거부로 인한 구실 찾기에 좀더

몰두하고 있고 좀더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안 심사 파행을 통한 국정조사 파행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더 황당한 건 예결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당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정부 부처가 심사 참여를 거부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 대표 기관인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고 국민을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덧

붙였다.

그는 “예결위 공식 논의가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국민의힘과 협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며 “민주당의 이런 요구가 발목잡기라는 구태의연한 정치적 주장만 하지 말고 국정조사 파행 필수 부릴 생각만 하지 말고 성실히 응답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639조 예산은 윤석열 정부 예산이 아닌 국민 예산”이라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尹,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불법과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오늘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5면>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 거부로 돌입,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다”며 “국민 일상생활까지 위협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불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로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최구슬을 쓴 행위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없는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제 임기 중에 노사 범죄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환기자

김정희 전남도의원,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기자동차 늘고 노후 경유차는 폐차, 자동차정비업계 위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계의 위기를 반영해 전남도의회가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전남도의회는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 24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으로 정비물량 감소 등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계의 경영 위기가 현실화함에 따라 전남도가 자동차정비업자와 종사자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 자동차 점검·정비·검사 시설의 개선 ▲ 자동차 정비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신기술 교육 ▲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전남도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들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도교통부가 발표한 9월 말 기준 ‘자동차 연료별 누적등록 현황’에 따르면 내연기관 자동차는 지난 6월 2천367만여 대에서 2만5천여 대가 늘어난 반면 친환경 연료(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자동차는 같은 기간 136만여 대에서 11만 3천여 대가 증가, 8.3%가 늘어나 내연기관 자동차 대비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이 확산함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시장이 축소돼 자동차정비업자와 종사자의 직·간접적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기본법을 보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산업의 노동자나 중소기업인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정의로운 전환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2035년이면 내연기관 자동차는 등록 자체가 제한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자동차정비업계가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남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24일 상임위를 통과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